

안그래도 혼잡한 광주 대형마트 주차장 유료화에 인근 교통지옥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롯데아울렛 지하 주차장에 주차장 유료화를 알리는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평일 주차장 텅텅 비는데 주변 골목은 불법주차 전쟁... 시민들 불만 롯데마트 "비고객 주차도 넘어"...홈플러스 등 무료화 유지와 대조 지하철 공사 땀 혼잡 극심...주민들 "지역상생 차원 평일엔 개방을"

광주 최대 쇼핑센터인 롯데마트(롯데 아울렛 포함)가 평일이던 텅텅 비는 주차장을 갑자기 유료화해 인근 도심이 큰 교통 혼잡을 빚고 있다.

그동안 롯데마트 주차장을 이용했던 주변 상인·주민을 비롯한 롯데마트 직원들까지 유료화 이후 인근 골목 등에 불법·무단 주차를 일삼으면서 도로 곳곳이 막히는 등 '교통 지옥'이 되고 있다.

특히 롯데아울렛이 있는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일대는 2024년 개통 예정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 예정 구간으로 공사 때 교통혼잡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주차장 유료화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반면 홈플러스 동광주점 등은 이미 1년여 전에 주차장 유료화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인근 주민과 고객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무료화를 유지해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일 롯데마트 등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수완지구 롯데마트·롯데아울렛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주차장 이용을 전면 유료화 했다. 주차료는 최초 30분 간 기본요금 1000원이 부과되며, 이후 30분 당 10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해 하루 최대 2만원까지 징수한다. 롯데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 1500여명도 유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롯데마트 수완점 주차장의 주차가능 대수는 지하 1층과 지상 4·5·6층을 포함해

총 1630대에 이르지만, 유료화 때문인지 이날 찾은 롯데마트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었다. 심지어 지상 5층 주차장에는 고작 4대만이 주차해 있었다.

이날 주차장에서 만난 주부 이영주(35·광주시 광산구)씨는 "평일에 주변을 방문할 때면 주차공간이 넉넉한 이 곳을 자주 이용해 왔다"면서 "주차해 봤다가 장을 보는 경우도 많았는데, 갑자기 유료로 전환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객은 "주말과 휴일에만 좀 복잡할 뿐 평일에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다. 주말이나 휴일의 유료화는 이해가 되지만, 평일까지 유료화를 한 것은 너무 한 듯 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롯데마트 주차장 유료화 이후 기존 주차 차량들이 인근 골목 등에 불법·무단 주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금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께 롯데아울렛 수완점 건너편 골목길은 평일임에도 무단 주차차량들이 가득 들어차 인근 도로의 교통난까지 유발하고 있었다. 왕복 2차로인 골목길 한쪽을 불법 주차 차량이 차지하다보니 양방향 통행 차량들이 서로 마주보고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롯데마트 인근 장덕동에서 사설주차장을 운영중인 장모(75)씨는 "롯데마트 유료화 이후 이 동네 골목은 주차장이 됐다"며 "우리 주차장에 월권을 끊겠다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계약자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주변 상가 임자들이 주차장이 무료라는 점을 악용해 오전부터 차량을 '알박기' 식으로 세워놓아 일부 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비고객 주차차량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 실제 이용 고객의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롯데마트측은 일부 알박기 차량은 물론 마트 직원까지도 유료화 대상에 포함, 주변 불법 주차 행위를 부채질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롯데마트의 또 다른 지점인 광주 상무점도 주차요금만 조금 다를 뿐 유료화로 전환한 지 이미 오래다.

반면 동광주IC, 문흥IC, 제2순환도로가 인근에 있는 등 광주 도심내 혼잡구간 중 한 곳인 홈플러스 동광주점은 주차료 징수 시설을 구축하고도 주민 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징수를 보류하고 있다.

광주시는 차량 증가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주차장 개방과 주차장 공유 운동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마트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만큼 교통 혼잡을 줄이는데 주차장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완지구에 사는 박정균(29)씨는 "대기업인 롯데마트가 문발이에만 급급한 듯해 안타깝다"면서 "자기들(롯데마트) 때문에 항상 혼잡함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평일만이라도 무료로 개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남편 살해한 불륜 여성, 원룸 건물 노리고 계획 범죄"

서부경찰 "수면유도제 검출"

남편을 집에서 살해한 여성의 범행이 남편의 원룸건물을 가로채기 위한 계획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서부경찰은 13일 살인혐의로 구속된 60대 여성 A씨의 남편 B씨의 뇌 분비물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집 근처 병원을 찾아 "우울증이 있다"며 수면제 22알을 처방받았다.

이때부터 A씨의 살인계획은 시작됐다.

6일이 지나고 일요일이던 지난 5일 밤 남편에게 저녁밥을 차려주면서 뜨거운 국에 수면제를 넣은 것이다. 이를 모르는 B씨는 아내가 차려준 저녁과 함께 맥주를 마셨다. 그리고 한시간 쯤 지나 거실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한 A씨는 집에 있던 둔기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치고, 노끈으로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거실바닥이 B씨의 피로 물들자 A씨는 걸레와 이불로 피를 닦아낸 뒤, 내연남 C(61)씨를 불러 피 묻은 이불과 걸레가 담긴 김장용 비닐봉투를 처리하도록 했다.

A씨는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지난달 중순께 남편에게 내연남과의 불륜사실을 들킨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남편이 최근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고 가서 살던지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숨진 남편 B씨가 원룸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A씨가 살인 전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관련 자문을 받은 점에 주목, 재산을 노린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강제징용 피해자들 오늘 2차 집단소송 제기

일본 전범기업 상대 광주지법에 소장 제출키로

광주·전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2차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4일 광주지방법원에 집단소

송 2차 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일제 노무 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밝히는 판결을 내렸다.

시민모임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 기업들이 아직까지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일본정부는 수출규제 조치 등을 취하며 적반하장 태도라며 지난해 4월 제기한 1차 집단소송에 이어, 14일 기자회견과 함께 집단소송 2차 소장 제출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불법체류 러시아 커플

전 남친 사진 때문에 다투다 여성이 흉기로 현 남친 찔러

완도경찰은 13일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러시아 여성 A(41)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께 완도군 완도읍 한 모텔에서 동거 중인 러시아인 남자친구 B(36)씨의 등을 흉기로 찔러 현

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결과 불법체류자인 A씨와 B씨는 이날 모텔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 휴대전화에 전 남친의 사진이 저장돼 있는 것을 놓고 크게 다투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흉기에 찔려 모텔에서 도망 나오는 B씨를 본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연평도 조업 중 납북된 어부들 50년만에 재심서 무죄

연평도에서 조업 중 납북돼 북한에 억류됐다가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복역한 어부들이 판결 확정 이후 50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태호)는 반공법 위반, 수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1926년 출생, 사망)씨 등 8호 어부 7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연평도 부근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중 1967년 5월 24일 자정께 어로한계선(어로허용선)을 넘어 작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내로 송환돼 주변인들에게 "죽을 줄만 알았더니 고생도 안 하고 잘 있다 왔다. 북한은 거지가 없더라. 돈 없어도 대하까지 무료로 공부 시켜 준다"며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들은 북한에 납북됐다가 4개월 만인 1967년 9월 송환됐다.

이후 1968년 5~8월 탈출로 인한 반공법 위반, 잡입 및 찬양·고무로 인한 반공법 위반, 수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탈출로 인한 반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공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수산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 재심 재판부는 "선원들의 발언은 지인들에게 단순히 북한에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선전술책'으로 구성시켜준 것이다. 감사가 심했다'고 부정적인 발언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요리 중 자리 비워 불...주택용 화재경보기 덕분에 조기 진화



○··70대 노인이 요리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화재경보기 덕분에 조기 진압돼 안도의 한숨.

○··13일 광주동부소방에 따르면 A(여·77)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동구 소재 자신의 집 주택에서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뒤 장을 보기 위해 집을 비운 사

이 집 안에서 발생한 연기와 함께 화재경보기에서 울리는 경보음을 지나가던 중학생 김모(15)군이 듣고 119에 신고했다는 것.

○··화재를 인지한 김군의 신고로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냄비만 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관계자는 "김군의 신속한 신고로 인명피해는 물론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